

도, 기재부 예산심의 막판 총력전

김관영 지사 주재 전략회의
핵심사업 반영 여부 점검
기재부 3차 심의 본격 대응
정치권과 협력 확대키로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단계에서 도정 핵심사업 반영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도는 7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기재부 단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핵심사업의 반영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향후 예산심의 대응 방안도 논의하며 막판 전력을 조율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기재부 예산실이 잔여 쟁점사업을 중심으로 3차 심의에 돌입함에 따라, 정부안 예산심의 테드라인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보다 강도 높은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도의 주요 현안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한 데 이어, 오는 14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실장 및 예산심의관 등 주요 기재부 관계자에게 전화와 문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7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열린 2026년 국가예산 확보 기재부 단계 전략회의에서 주요 핵심사업의 반영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예산심의 대응 방안도 논의하며 막판 전력을 조율하고 있다.

자메시지를 통한 수시 접촉으로 사업 타당성과 정책 부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재부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협상안에 대비한 대안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정치권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방

침이다. 한병도 국회 예결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여당 핵심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금이야말로 도

와 시군,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사업을 끝까지 지켜내야 할 때"라며 "정부안 확정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기원, 전국 농기원 최초 시험연구포장에 QR코드 도입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이 시험연구포장(구역)에 QR코드를 도입해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전국 농업기술원 중 처음으로 구축했다.

이번에 도입된 QR코드 시스템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했다. 포장 입구에 설치된 현황판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시험과제 계획과 추진현황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현황판을 수정 제작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바로 갱신할 수 있어 효율성도 높여줬다.

이에 따르면 QR코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연간 약 1,100여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현장 중심의 디지털 농업 실현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원은 기존 농촌진흥청 사례를 벤치마킹하되, 두 가지를 개선했다. 연구보안이 필요한 과제를 고려해 QR코드 접근 정보를 일반인용과 연구자용으로 구분했고, 강한 햇빛에 QR코드 안내판이 손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맥스에 UV인쇄를 적용하여 내구성을 높였다. /이만호 기자

도,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2025년 상반기 민원 처리 우수직원 시상 및 간담회'를 열고, 신속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격려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민원을 담당한 생활환경과 최춘성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자치행정과 김현정 주무관, 장려상은 산림자원과 설재희 주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업무를, 설 주무관은 나무병원 및 산림조합 등록·변경 신청 민원을 담당했다.

시상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수상 공무원들과 함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민원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만호 기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 아니다”

도의회 세미나실서
정책 토론회 개최
생활·법률지원 모색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사)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신무 변호사와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송영은 경관, 전북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송기택 국제협력진흥원 교류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강신무 이사장과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송영은 경관이 맡았으며, 각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생활·법률 지원방안에 대한 제안과 외국인 관련 범죄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강신무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안정적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맞춤형 법률 상담지원 서비스, 사법통역사 양성, 가족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북경찰청 송영은 경관은 조직화된 외국인 범죄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범죄에 노출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도의회 한정수 의원은 “지자체와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유학생 유치 이후 어떻게 지원,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면서,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공공의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가정법원 설치, 도의회 차원 힘 보탠다

문승우 의장·김희수 부의장, 전주지방법원사회 회장단과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주에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은 7일 의장실을 방문한 전북지방법원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은 7일 의장실을 방문한 전북지방법원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도의회 한빛원전특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의견서 산업부 제출

고창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원전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이 정부의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김만기 위원장은 류창환 산업부 원

전환경과 사무관에게 직접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를 전달하며,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특별지자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민주 안호영 의원, 행안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
행정 통합 관련 “특정 시기 정해놓고 있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병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특히 이번 통합 논의로 갈라진 전주와 완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수해복구·지원, 책임감 있게 최선”

민주 박수현 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이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됐다.

이로써 해당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세금 감면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집중호우는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이어졌으며, 공주 181억원, 부



여 106억원, 청양 118억원 등 공공시설 피해액만 712억원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힘써왔다.

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은 국민 고통의 값”이라며 “책임감 있게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반복되는 농업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대응이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남원·장수 국토부 지역개발 선정 환영”

민주 박희승 의원, “지역 소멸 위기 대응·균형발전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임실·순창·장수)은 “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에, 장수군은 ‘방화동 국민 관광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남원역세권 개발에는 총사업비 1,958



억원이 투입되며, 드론, 스마트농업, 바이오산업 등을 집약한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복합환승센터, 물류허브 등을 갖춘 첨단 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된다.

장수군은 총사업비 35억원 규모의 방화동 관광지 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 정비, 체험 공간 확충, 위케이션 센터 등을 도입해 체류형 관광단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선정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의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맞춤형 지역발전 전략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돼야”

민주 윤준병 의원, 목재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탄소중립 실천·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 기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농해수위)은 7일,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목재의 날 지정 및 목재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목재의 날’ 지정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 △진흥회에 목재산업 진흥 기능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목재는 대표적인 탄소 저장 자원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국가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국산 목재 생산량을 2050년까지 800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업 진흥체계와 국민 인식 확산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의 선순환 활용과 농산촌 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정음=김대환 기자